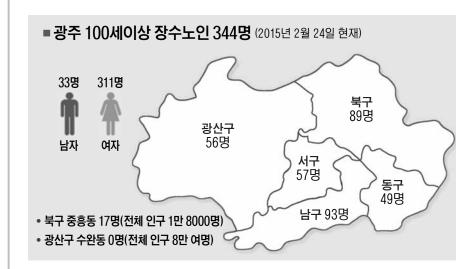
# 광주 100세이상 344명…노인 편의시설 많은 남구가 '장수촌'

소득 수준·대형 의료시설·생활 환경 개선 등 영향 중흥동 17명 거주 단일동으로 '최다'…수완동 全無



평균 소득수준이 다른 자치구보다 높고, 인근에 대형 의료시설, 편의시설 등이 밀집한 광주 남구 지역에 100세 이상 장수노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도심인 광산구 수완동은 단일동으로 전국에서 거주인구가 가장 많지만 100세 이상이 단한 명도 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거주 100세이상 노인은 지난 2013년 169명(남성 8명, 여성 161명)에서 지난해 300명(남성 31명, 여성 269명), 올 2월 24일 현재 344명(남성 33명, 여성 311명)으로 집계됐다. 불과 2년만에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여자가 남자의 10배에 가까웠다.

이 같은 100세 인구의 증가는 급격한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 선진 의료기술의 발전, 소득수준 향상, 생활환경 개선 등 이 주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100세 노인의 5개 구별 거주 인구는 남 구가 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북구 89 명, 서구 57명, 광산구 56명, 동구 49명 소이었다

구별 인구가 북구(45만1936명), 광산구(40만6074명), 서구(31만1985명), 남구(22만1120명), 동구(10만1833명)순이라는 점에서, 100세 노인의 거주 수와 동별인구가 비례하지는 않았다.

타 자치구에 비해 적은 인구에도 남구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높은 것은 '광주의 강남'으로 불릴 정도로 주민의 평균 소득 수준이 높고, 노인이 거주하기 편한 각종 편의시설과 인접한 대형 의료시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남구청 관계자의 말이다.

단일동 중에서는 북구 중흥동에 가장

많은 17명의 100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남구 방림동·월산동·북구 우산동 각각 12명, 서구 화정동·남구 효덕동·백운동·양림동 각각 11명, 동구 학동·남구 봉선동 각각 10명 등의 순이었

북구 중흥동은 1·2·3동 거주 인구를 모두 합해도 광주 동 중에선 중간 수준인 1만8000명에 불과하지만, 노인들이 선호 하는 단독주택 등이 많고 대중교통 편의 성 등이 높은 구도심이라는 특성 때문에 100세 노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젊은층이 많이 모여 사는 아파트 밀집 신도심 지역에서는 100세 노인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광주지역 49개동(단일동 기준) 중 100 세 노인이 거주하지 않는 동은 7개 동에 불과했으며, 이 중 5개 동은 아파트 밀집 신도심 지역이었다.

전국 단일동 중 최다 인구인 8만여명이 거주하는 광산구 수완동과 인구 4만 3000명 밀집지역인 서구 유덕·치평동, 북구 동림동 (2만 2000명 거주), 광산구신가동(2만4000명 거주) 등 신도심 지역에는 100세 노인이 단 한 명도 살고 있지않았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구 또는 동별로 인구가 많다고 해서 100세 이상 장수노인이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아직까지 100세 노인의 거주지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은이뤄지지 않았지만, 소득수준과 거주지주변 생활인프라 등이 거주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박진표기자 lucky@

### 월성 1호기 수명 연장…2025년 만료 한빛원전은?

전문가·주민 등 강력 반발···한수원, 다음달부터 재가동 한빛, 순차적 수명 만료···환경단체 "폐로 준비위 꾸려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주민, 환경단체, 원자력 전문가 등의 반대에도 불구,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된 원자력발전소 월성(경주) 1호기에 대해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2025년 1호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설계 수명이 만료 예정인 영광 한빛원전도 '안전보다는 원 전'을 앞세운 원안위에 의해 수명이 연장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원안위는 지난 26일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체 위원 9명 중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위원 2명이 퇴장한가운데 월성 1호기에 대한 계속 운전 허가(안)를 결정했다.

이로써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2년 정해진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을 중단한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재가동 준비를 거쳐 4월께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이날 심의와 표결 과정에서 계속 운전 찬성측과 반대 측이 강력하게 맞서며 대립했고, 표결이 반대 측 위원 2명이 퇴장하고 정부·여당 추천으로 위촉된 7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향후 원안위 운영에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월성 주민과 환경운동연합 등은 ▲원 전 부지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위 원이 원자력을 규제하는 위원으로 활동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과 함께 ▲월 성 1호기 폐쇄에도 전력수급에는 영향이 없다는 국회 보고서 ▲원자로 격납건물 안전기준(R-7) 미적용에 따른 위험성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에 대한 허위보고 등을 지적하며, 원전 당국의 '막가파 식' 수명연장에 반대해왔다.

또한, 월성 1호기에 대한 스트레스테스 트(원전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검증) 전문 가검증단 보고서에서는 민간검증단과 KINS 검증단이 안전성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드러내 안전성 논란이 계속됐다.

한편, 지난 1986년 8월 상업 운전을 개시한 영광 한빛 1호기가 수명 만료를 10년 앞둔 상황에서, 지역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수명이 만료되기 전 원전을 폐쇄하는 '폐로 준비 윈원회'가 꾸려져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제기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



"유관순 열사 정신 잊지않겠습니다"

제96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정문 '꿈새김판'에 유관순열사의 사진과 목숨을 바쳐 나라를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배어있는 유언이 새겨져 있다. /연합뉴스

말했다.

#### 신임 광주비엔날레 대표에 박양우 전 문체부 차관

광주비엔날레 신임 대표이사에 박양 우(57)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선임 됐다. 임기는 3년이다. 〈인터뷰 20면〉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지난 27일 오전 제139차 이사회를 열어 박 전 차관을 신 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재단은 "박 신임 대표이사는 문화 행정 경험과 예술 경영 이론을 겸비한 전문 가로 광주비엔날레 재도약을 위한 발판



을 마련할 적임자"라 고 선임 배경을 설명

광주 출신인 박 대 표이사는 뉴욕 한국 문화원장, 문화체육 관광부 차관 등을 역 임했다. 영국에서 예

임였다. 영국에서 예술경영을 공부한 박 대표이사는 중앙대 교

수로 예술경영학을 강의하는 등 현장 경험과 이론을 갖춘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부위원장, 2012광주ACE Fair 추진위원장 등을 맡아오면서 지역 사회와 꾸준한 관계를 유지해온 박 신임 대표이사는 광주비엔날레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간의 상호협력체제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인기자 kki@

## 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로 개선사업 통과

#### 전남도 투융자 심사 26개 사업 추진…섬진강 뱃길 복원 재검토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안전자치부의 중앙투자사업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하지만 전남도가 고흥군과 함께 추진 하고 있는 국가비행 종합시험 인프라 개 발·구축사업의 경우 재검토 결정이 내려 져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3036억원이 투입되는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체결 이전 2단계 심사 이행 등을 조건으로 정부 심사를 통과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394억원 규모의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민간 자본 확보 방안 마련을, 170억원짜리 곡성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구체적인 분양 활성화 방안 마련등을 조건으로 각각 심사를 마쳤다.

한편 전남도의 심의에서는 광양시가 75억원을 들여 추진하려던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과 40억 원이 투입되는 영암군의 대불국가산업 단지 외국인기숙사 신축사업이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전남도는 지난 27일 제1차 전남도 지 방재정투자사업 심사위원회를 열고 각 시·군이 제출한 28개 사업에 대해 심사 했다. 28개 사업 중 21개가 적정, 5건이 조건부 결정이 내려져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윤현석기자chadol@





